“상수원 고갈 늦춰라”…광주시 공급량 확대 부심

동복댐 25.46%·주암댐 28.6%
보성강댐 발전용수 활용 등 사활
“최고 대책은 시민 물절약 실천”

역대급 가뭄 상황에서 광주시가 새해 본격화할 상수원 고갈 위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일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 시민 상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은 25.46%, 주암댐은 28.6%를 기록했다.

지난달 22~24일 광주·전남지역에 4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지만 강수량으로는 7.4㎜에 불과, 가뭄 해갈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동복댐 예상 고갈 시기는 애초 3월 말이었다가 지난해 12월 둘째 주 절수율(8.7%)을 적용할 경우 5월 중순으로까지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수원 고갈에 앞서 1월 예고를 거쳐 3월 제한급수가 현실화한 가운데 여러 취수 대책으로 그 시기를 더 미룰 여지도 생겼다.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주암댐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주암댐 취수량이 하루 10만t가량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했다.

주암댐 물 배분은 섬진강 수계까지 영향을 미쳐 이 가운데 얼마나 광주 상수원으로 공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산강 덕흥보 주변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도 이번 주 중 시작된다. 공사는 관로 연결, 가압 펌프 설치 등 2단계에 걸쳐 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말이나 5월 초 공사를 마치면 하루 2만~5만t 물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동복댐 상류 쪽에 관정을 개발해 물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취수 대책이 순조로우면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고갈 시기를 미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물 사용량이다. 대대적인 물 절약 실천 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셋째 주 49만4,000t이었던 하루 평균 물 생산량은 12월 넷째 주 44만2,000t까지 줄었다가 다섯째 주 45만3,000t으로 다시 늘어났다. 전년과 비교한 물 생산량 감소율도 12월 넷째 주 8.9%까지 상승했지만, 그다음 주에는 6.4%로 떨어졌다.

취수 대책을 총동원해 물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지만, 줄었던 물 사용량이 늘어날 조짐을 보여 시민 협조가 더 절실해졌다.

시 상수도 사업본부 관계자는 “시민 참여로 물 생산량이 가파르게 줄어들다가 연말 영향이 있어서인지 다소 늘었다”며 “공급 증대와 소비 절감을 동시에 이뤄야만 물 부족 위기 극복이 가능한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물 절약 실천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전남도청, 새해 첫 출근 행사

전남도 실·국장들은 2일 오전 도청 윤선도홀에서 계묘년 새해 첫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큰 성취를 다짐·기원하는 ‘새해 첫 출근 직원 맞이’ 행사를 펼쳤다. /전남도 제공

‘예산 갈등’ 광주시-의회, 조기 추경 ‘솔솔’

양측 긍정적…이르면 3월 가능

올해 광주시 예산이 증액 없이 삭감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시의회 사이에서 조기 추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2,089억원을 삭감한 7조1,102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증액 없는 예산 삭감으로 가뭄 피해 극복이나 청년 창업 지원 예산 등 현안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예산안 통과 이후 강기정 시장은 “예산 심의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원칙을 지켰다”며 맞섰다.

예산을 둘러싼 광주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결국 해를 넘겼으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의회가 감시와 견제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협업과 협치에 중심을 두고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달 내에는 해묵은 갈등을 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경 예산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조기추경에 대한 의회와 협의에 적극적이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보통 4월이나 5월에 열리는데, 시와 의회가 협의하면 1~2개월 먼저 열릴 수도 있다.

시의회 임시회는 4월 열릴 예정이나, 협의가 진전되면 3월에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는 의회와 협의해 가뭄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을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비 사업이 이달부터 확정돼 통보됨에 따라 정확한 추경 예산 규모를 확정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합해 추경안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은 집행부만의 의지만으로 어려워, 의회와 수시로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송정역 광장 조성, 새해 1순위로 추진”

국힘 광주시당, 현안과제 제시
김정현 위원장 “설계안 건의”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2023년 새해 첫 번째 풀어야 할 지역 현안과제로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앞 만남의 광장 조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2일 “올해 첫 번째 과제로 광주송정역 앞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에게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현 시당위원장(사진)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광산구청 관계자와 함께 대전 국가철도공단을 방문, 광주송정역 광장 조성을 공식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측에 “광주송정역은 호남 광역교통망의 중심이자 호남권역 관문으로 이용객과 방문객들의 만남·여가·휴식 장소가 필요하다”며 “광주 송정역사 증축 3차 설계안에 반드시 광장 조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역, 수원역, 서대구역, 세종시 조치원역 등 KTX역 앞에 광장이 조성돼 있다”며 “광역시 KTX 가운데 광주만 광장이 없다. 광주송정역에도 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당 차원에서 올해 지역 현안 해결 1순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보현 광산구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송정역은 다른 광역시·도 고속철도역에 비해 열악하다”며 “KTX투자선도지구 등 송정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광장 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지자체와 협의해 광장 조성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현장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송정역은 1일 평균 이용객 2만2,000여명, 1일 평균 유동인구는 4만4,000여명에 이른다. /길용현 기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복원 본격화

‘민주 사랑방’ 부분개축

인권 활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고 홍남순 변호사(1912~2006)의 가옥을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화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동구 궁동 홍 변호사 가옥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최근 시작됐다.

가장 최근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29호(2017년)로 지정된 이 가옥은 고인의 생활 공간이자 1963년 변호사 개업 당시 활동했던 공간으로 ‘민주 사랑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5·18 당시 항쟁 수습을 위한 대책 회의 장소로도 활용됐다.

해당 가옥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목조 구조물 주변을 ‘ㄷ’자 형태로 확장한 벽돌 구조 부위 안정성이 매우 좋지 않아 철거 후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 5·18 기념사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전체 또는 부분 개축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화순에 있는 홍 변호사의 목조 초가 형태 생가는 복원을 마쳐 민주·인권 교육 등에 활용되고 있다.

홍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양심수들을 위한 무료 변론 등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5·18 당시 ‘죽음의 행진’에 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하고, 이후 5·18구속자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 /길용현 기자